

보도시점 2023. 12. 19.(화) 15:00 배포 2023. 12. 19.(화) 10:00

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신고 지원체계 구축 추진

-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(성매매·인신매매) 개최(12.19~21, 서면회의)
-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그루밍, 성폭력 등 온라인 성착취 신고·상담 등 강화

- 여성가족부(장관 김현숙)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(성매매·인신매매)를 열어(12.19~21, 서면개최) △ 채팅앱, 웹사이트 등 온라인 성매매·성착취* 대응 제고, △ 유해매체 점검 등을 통한 아동·청소년 성착취 예방 강화, △ 관계부처·지자체 등과 성매매 방지 점검 및 단속 협업 강화 등을 논의한다.

* 그루밍(길들이기)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성매매, 성폭력, 성착취물 배포 등 포함

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요 】

- 근거 :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규정(여성가족부 예규 제51호)
- 구성 : 위원장(여성가족부 차관), 정부위원(여가부·법무부·방송통신위·대검찰청·경찰청, 5개 기관 국장급), 민간위원(여성계, 학계 등 관계전문가 9명)
- 기능 :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주요정책 협의

-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협업하여 올해 2월부터 아동·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상담을 위한 사이버상담 채널 ‘디포유스(d4youth)*’를 운영하고 있다.

* 아동·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상담을 위한 채널로써 10월까지 플랫폼(앱, 메신저 등)을 점검(모니터링)하여 3,862건의 성착취 관련 정보 신고 등이 이루어짐

- 또한,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성매매 우려가 높은 유흥업소, 숙박업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.
- 아울러 인신매매방지법 시행(’23. 1월)에 따라 전담 부서(권익구조과)를 신설(’23. 7월)하여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, 정책조정협의회 구성·운영,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·고시, 홍보 및 교육 동영상 제작·보급(’23. 9월) 등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한편,

- 관계기관(법무부, 고용부, 경찰청, 지자체) 합동으로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합동점검('23.10~12월)을 실시하고 있다.

□ 향후 여성가족부는 아동·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등 근절을 위해,

-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 지원센터(전국 17개소)를 ‘성착취 피해아동·청소년 지원센터’로 개편하여 아동·청소년 성매매와 연계된 그루밍(길들이기), 성폭력 등 종합 서비스를 확대하고,
- 방송통신위원회, 지자체,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불법 성착취·성매매 정보 등에 대한 점검(모니터링)을 보다 촘촘히 하는 한편,
- 법무부, 고용노동부, 경찰청 등과 단속 강화,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관리 등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.

<주요 추진방안>

- ✓ (방송통신위·여성가족부) 아동·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·신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상담·신고 지원
 - ※ ('23) 성착취 상담·신고 소프트웨어 개발 → ('24) 성착취 상담·신고 지원
- ✓ (여성가족부)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 지원센터를 ‘성착취’ 피해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성매매 뿐만 아니라 그루밍(길들이기), 성폭력 등 종합 서비스 확대('24년~)
- ✓ (여성가족부) 초·중등생 대상 온라인 그루밍(길들이기)을 통한 성착취 방지에 특화된 교육콘텐츠 제작 및 홍보 추진('24년~)
- ✓ (고용노동부)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 의무화('24년~)

□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“온라인 중심의 아동·청소년 성착취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대응체계 구축과 피해예방교육이 중요한 과제”라며,

- “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한편, 민·관 협력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를 차단하고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	책임자	과 장	장석준 (02-2100-6441)
		담당자	사무관	김대중 (02-2100-6435)
	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	책임자	과 장	김경희 (02-2100-6161)
		담당자	사무관	강동근 (02-2100-6162)

□ **온라인 불법정보 등 심의·차단** (방송통신위, 여성가족부)

- 웹사이트, 모바일앱(랜덤채팅)상의 성매매 알선·유도·매개·광고 정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*
 - * ('21) 9,100건 → ('22) 16,795건 → ('23. 8월) 17,538건
- 성매매 알선·음란물 등 성인스팸 발송 전화번호 이용정지 및 발송업체 (전화채팅 서비스 제공업체) 행정처분*
 - * ('20) 12건 → ('21) 17건 → ('22) 8건
- 온라인상 성매매 노출 위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상담신고 등 실시
 - * ('23.1~10월) 의심 정보 신고(3,862건), 사이버 상담(225명),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홍보활동(1,019,014건), 지원기관 연계(62건) 등
- 「정보통신망법」 제42조의3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대상 의무조치 준수 및 자체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등 점검('22. 9~12월)
 - * 서면점검 : 전체 청소년보호책임자(141개)/ 현장점검 : 포털, 랜덤채팅 사업자 등 25개사

□ **성착취 피해자 보호 및 예방** (여성가족부, 법무부, 경찰청)

- 「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 지원센터」 (17개소) 설치하여 긴급 구조, 상담, 법률, 학업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(' 21년~)
 - * 연도별 지원실적 : ('21년) 727명 → ('22년) 862명 → ('23.6월) 659명
- 성매매 등 피해아동·청소년 조사 시 2차 피해 방지 및 안전조치 강화
 - * 해바라기센터 연계하여 동성 경찰관 조사, 가명 조서 작성, 진술 조력인 참여 등
- 수사 과정에서 성판매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과오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자 식별·보호강화 계획* 수립·추진('23. 5월~)
 - * 성판매자 권리·미성년자 통지 등 제도 개선, 성판매자 인권보호 및 피해식별 교육 강화 등
- 내실 있고 엄정한 성구매자 교육*을 통해 성매매 수요 차단 등 재범방지
 - * 2020년 899명, 2021년 1,061명, 2022년 1,991명 교육 이수

- 아동·청소년 대상 맞춤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('22년 14종), 예방교육 플랫폼(Dicle) 구축('22.5) 및 플랫폼 연계확산
- ‘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’를 통한 24시간 상담, 피해촬영물 삭제지원, 수사·법률·의료지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('18~)
 - * 지원실적('18.4.~'22.12.) : 총 728,639건(삭제지원 666,144건 포함)

□ **성매매 현장 점검·단속** (여성가족부, 고용노동부, 경찰청, 지자체)

-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온라인(알선사이트, 채팅앱 등) 모니터링·오프라인(유흥업소, 성매매집결지) 성매매 집중 단속
 - * 집중단속('23.7.12~8.23)으로 총 428건, 853명 검거, 성매매 광고전화 1,865건 차단
- 불법 성매매 업소 재영업 등 억제
 - 성매매 범죄자 추적·수사, 건물주 입건, 범죄수익금 환수 등 실시
 - * (검거인원) '21년 7,147명 → '22년 7,501명 → '23. 9월까지 4,936명
- 지방자치단체 주관, 유관기관(시도경찰청, 소방본부 등), 일반시민(서울시) 등 합동점검·모니터링 실시('22년~)
 - 유흥업소, 집결지 등 성매매 알선 및 광고,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여부 등 확인
 - * ('22년) 136,365건 적발, 194명 신고 → ('23년 상) 47,347건 적발, 168명 신고
- 직업정보제공사업자·직업소개사업자 지도·점검
 - 성매매처벌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직업소개 등 직업안정법 위반 점검
-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랜덤채팅앱 점검을 통하여 시정요구* 등 조치('20.12월~)
 - * 253개 앱 중 243개 시정완료 → 미이행 10개 앱 시정명령('23.8월)
- 아동·청소년 성매매 등 불상 피의자를 추적·검거하는 인력으로 ‘여성청소년강력범죄수사팀’을 150개 경찰서에 설치·운영